# 경선 레이스 출발지 제주… 대표 주자는?

2022 대통령 선거

## 정권 재창출 vs 정권 교체
## 20대 대선 2022년 3월 9일
## 원 지사 야권 후보될 지 관심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내년 3월 9일 치러진다. 선거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발걸음도 조금씩 분주해지고 있다. 이번 대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총력전과 이를 막으려는 야권의 사활을 건 한 판 승부가 될 전망이다. 제주는 여야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예선전 격인 후보 경선의 출발지여서 정치권이 공을 들이는 지역으로 꼽힌다. 앞으로 펼쳐질 대선 레이스를 점검해본다.

**▶몸 풀기 들어간 여야 후보군… 원희룡 지사 야당 후보로 선출 가능성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대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서 차갑게 돌아선 민심을 확인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 전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치렀던 이번 선거에 대패하면서 대권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지사는 선거 패배 책임론에서는 거리가 있지만 여당 심판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위기의식이 엿보인다.

여기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지지층 등이 겹치는 이 전 대표 입지가 재보선 패배로 위축되면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제3후보의 후보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이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정권교체라는 범야권의 공동목표를 위해 국민의힘은 야권 대통합을 추진 중이다. 재보궐 선거에서 힘을 모은 안철수 대표가 소속한 국민의당을 비롯해 정치권 밖에 있지만 대권 경쟁력이 만만치 않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통합 추진 노력이 한창이다.

때문에 야권의 후보 선출은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미한 지지율이지만 국민의힘이 대권 후보난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원 지사가 최종 후보로 선출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대선 후보 윤곽 언제쯤 드러날까**=더불어민주당 당헌은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9일까지는 후보 선출을 마무리 할 전망이다. 당 내 경선 일정은 6월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4·7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늦게 낸 국민의힘이 선거를 승리하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경선 연기론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 보다 두 달 정도 후보 선출이 늦다. 민주당의 경선 일정 연기는 모든 당내 대선 후보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현실화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헌에 따라 오는 11월 초까지 대권주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야권 대통합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야권 전체가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경선 레이스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제주도의회 지역구 현역의원 80% "선거 재출마"

2022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 도의원 31명 중 25명 재도전 의사
## 불출마 삼양·봉개-한림 무주공산
## 현재 기준 어긋난 선거구 5곳 촉각

4·7 재보선이 끝나며 도내 정치권의 시계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맞춰지고 있다. 한라일보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제주도의회의원 선거의 변수와 주요 선거구의 동향을 전한다.

**▶현역 대부분 출마·4개 선거구 불출마**=내년 제주도의원선거에서도 현역의원 대부분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한라일보가 조사한 결과 지역구를 둔 현역의원 31명 중 내년 도의원 선거에 재출마할 의사가 있는 의원은 25명이다. 전체 지역구 의원의 80%가 도의회 재입성을 노리는 것으로, 내년 선거도 여느 선거처럼 지역구 아성을 지키려는 현역의원과 이에 도전하는 주자들의 대결로 압축될 것으로 점쳐진다.

나머지 6명은 불출마하거나 입장을 유보한 경우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과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시기적으로 정치적 거취를 밝히기에 이르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4개 선거구에서는 현역의원 불출마가 예상된다. 전반기 제주도의회 의장을 지낸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갑)과 후반기 의장을 맡은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불출마 의사를 주변에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김 의원은 차기 지사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3선을 지낸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도 불출마한다. 안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제 정치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싶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3선인 박원철(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의원도 불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신 박 의원은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고려 중이다. 박 의원은 "도지사 선거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 중으로 추후 명확한 입장를 표명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주공산 누가 노리나**=현역의원 불출마가 점쳐진 4개 선거구에선 도의회 입성을 노리는 후보군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경·추자면 선거구에서는 현역인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다만 오 의원은 "한경·추자면 선거구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오 의원에 맞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고성권 전 한경면장과 김승준 전 제주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또 최근 퇴직한 고위 공직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노형 갑 선거구에서는 같은당 소속 현역 비례대표 의원 간 경선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비례대표)과 같은당 고현수 의원(비례대표)은 "노형 갑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초선인 두 의원은 지난 선거 때 각각 비례대표 2번과 4번을 배정 받았다.

한림읍 선거구에선 마을 이장 간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남근 귀덕리장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달고 도의원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김성수 금능리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공로연수 중인 강영돈 부이사관이 "퇴직 후 고향에서 봉사할 생각"이라며 도의원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삼양·봉개동 선거구에서도 현역 비례대표 여성의원 간 맞대결이 예상된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한영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이 최근 출마를 확정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교육의원은 5명 모두 향후 거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대익 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재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강시백 의원(서귀포시 서부)은 추석을 전후해 교육의원 재도전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김창식 의원(제주시 서부)은 현재 맡은 교육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부공남 의원(제주시 동부)과 김장영 의원(제주시 중부)은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 재출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 촉각**=내년 도의원 선거의 최대 변수는 앞으로 진행될 선거구 획정이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정치적 유불리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지난해말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 등을 토대로 헌법재판소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선거구 1곳 당 인구 상·하한선을 기계적으로 산출하면 상한선은 3만2701명, 하한선은 1만901명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라동을 비롯해 노형동 을, 애월읍 등 3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한경·추자면과 정방·중앙·천지동 등 2개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

도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구를 조정하려면 상한선 초과 3개 선거구는 쪼개고, 하한선 미달 2개 선거구는 통폐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통폐합 쪽 주민이 반발한다. 통폐합 선거구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인구 상·하한선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도의원 정수 증원을 고려한 것으로, 31개 선거구 중 인구 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 인구를 하한선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상한선도 낮아져 삼양·봉개동과 외도·이호·도두동,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까지 분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정수를 증원하려면 지역 형평성 논리를 깨고 2년 만에 다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해 쉽지 않다.

또 다른 선택지로 도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나 교육의원 정수를 줄여 그 몫으로 지역구 선거구를 늘리는 방식도 있지만 교육자치와 참여 민주주의 후퇴 논란을 일으켜 진통이 뒤따른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